

서의 소득세는 극히 일부의 부유 계층이 납세하는 부분 소득세로 되어 있다.

국세로서의 소득세 세율은 25%의 비례세율이다. 지방세로서의 소득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결정하지만, 이것도 비례세율이다. 지방 소득세 세율은 도, 코뮌 더욱이 교구가 과세하는 지방 소득세 합계에서 최저 26.51%에서 최고 34.41%까지 분산하여 있다. 평균으로는 31.65%로 되어 있다.

더욱이 국세로서의 소득세에서는 지방 소득세의 과세 최저한인 8,700크로나를 초과하는 소득 계층에는 200크로나라 하는 정액과세가 행해진다.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8,700크로나에서 213,000크로나 까지의 계층은 거의 30%의 지방 소득세와 200크로나의 정액세를 납세하고, 213,000크로나를 초과하는 소득 계층은 거의 30%의 지방 소득세와 25%의 국세로서의 소득세에 200크로나의 국세로서의 정액 소득세를 납세하는 것으로 된다.

역시, 임대료, 배당, 이자, 케피털 게인 등의 자산소득에 설정되는 자본 소득세는 30%의 비례세율로 원천 징수된다.

2. 지방소득세 징세

지방세로서의 소득세도 국세로서의 소득세도 스웨덴에서는 일원적으로 징세되고 있다. 그러나 탈세는 큰 문제로 되어 있지 않다. 그렇다고는 하나 스웨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대부분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. 그 때문에 국세청(이 주민등록번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 주민에게 부여됨, 1968년부터 도입)이 국민의 소득납세액을 통지하

고 그것에 기초하여 국민이 신고 납세한다고 하는 징세 방법을 취할 수가 있다.

교구가 주민등록을 실시하였던 스웨덴에서는 그것을 징세에 활용하는 것에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. 물론, 징세 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지하경제도 존재한다. 그러나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소득비례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탈세는 큰 문제로 되어 있지 않다.

3.2.2.2.2

3.2.2.2.2

IV. 맺는 말

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GDP의 40%를 복지에 쏟고 있는 나라이지만 “복지 수준에만 관심을 두고 유럽식(스웨덴) 모델을 바라보면 동전의 한 면만 보는 것”이라는 경계론도 나온다.

스웨덴의 복지전략은 전통적으로 생산을 강조하며 현금으로 주는 사회보장에 덧붙여 육아·양로·교육·주택 등 사회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. 사회 서비스는 기초단체가 대부분 수행한다.

이와 같은 사회 서비스 정착이 훌륭한 인적자원을 길러 내 사회에 배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하여 그들이 자랑하는 불보자동차, 노벨상 등이 탄생한 근원을 찾는다. OECD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의 스웨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50.2%로 우리나라(24.4%)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.

지금은 세금을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과거에 지나치게 사치스러웠던 연금·질병·실업보험 등 스웨덴 복지모델은 이제는 적정 수준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.